

## [ 종합·해설 ]

# “2개월새 4명...” 靑 인사검증시스템 못매

이춘호·박은경·남주홍 이어 박미석씨까지 출줄이 낙마

여야 “민정수석실이 적절한 해법 제시 못해 문제 키워”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27일 부동산 투기의혹 논란 끝에 결국 중도 하차함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로 연세 낙마한 이춘호 여성, 박은경 환경, 남주홍 통일장관 내정자에 이어 이번에 박 수석까지 웃을 벗게 되면서 청와대 검증라인에 본격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직후 박 수석과 다른 수석들의 재산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당사자들이 내놓은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는 점에서 관련 문제점을 사전 스크린한 민정수석실이 적절한 해법 제시에 실패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28일 여야를 막론하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을 강하게 문제삼았다.

한나리당 강재섭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 “인사시스템을 좀 더 잘 가동해 인사 문제로 이제 국민을 걱정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냈다.

김학원 최고위원도 “인사채용에 있어서 면밀한 사전검사를 거쳐 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면서 “재산이 많은 것이 죄가 될 수는 있지만 재산이 많으면 형성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왕왕 있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더 철저히 한 후에 임명을 해 이명박 정부가 순항하는데 훨씬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정부여당에

서 도마뱀 꼬리자루듯 정리됐다는 분위기로 나가는 것이 걱정스럽다”면서 “박 수석 한 사람의 사표를 받아들인 것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곤혹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출범 2개월 만에 고위직이 4명이나 물러난 것 자체만으로도 문책론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조각을 단행할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부의 인사파악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돼 치밀한 검증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것 만으로는 결코 ‘면피’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나리당 강재섭 대표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미석 청와대 수석의 자진 사퇴와 관련 내부 인사시스템을 좀 더 잘 가동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참모는 “사실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별 할 말이 없다”면서 “지금까지 물러난 인사들이 대부분 재산문제 때문에 낙마했는데 솔직히 그런 문제야 사전이든 사후든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차제에 내부 인사검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인사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부 존 안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정밀검증을 위해 복수의 검증팀을 통해 크로스체킹(교차확인)을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합여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보유하고 있던 2만5천여명 분량의 인사파일은 현재 정부기록보관소에 보관 중인데 이를 자료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위해 관련 절차 개선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특정 개인의 인사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해 보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임명 후라도 문제 가 될 사안에 대해선 민정·인사라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낙선 386들 ‘두문불출’

4년후 대비 지역구 관리...낮은 자세로 재기 모색

4·9총선에서 낙선한 통합민주당의 386 대표주자들이 최근 두문불출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중앙정치의 핵심에 섰던 이들이 세력별 모임이나 당 주최 낙선자 모임을 외면하고 차분히 ‘아인’의 길을 걸을 준비를 하는 분위기다.

28일 김효석 원내대표가 주최한 낙선자 오찬 모임에 당초 30여 명의 낙선자가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19명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386 낙선자는 우원식 의원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들이 비공식, 공식 모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이번 뿐만 아니다.

386의원들의 ‘닫힌’ 격인 신계륜 전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주도한 모임에도 임종석, 우상호 의원이 불참했다. 이인영,

정봉주 의원은 참석했지만 인사만 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이 같은 조용한 모습은 향후 행보를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풀이된다. 신계륜 전 총장과 유인태 의원 등은 당내 진로모색 등에 적극 나서려 하지만 386 대표그룹 중 상당수의 움직임은 둔하다.

외부활동보다는 차분히 자성하면서 내공을 기르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치에 무게 중심을 둔 나머지 지역구 닦기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은 만큼 4년 후를 대비해 지역관리에 공을 들여야 하는 점도 ‘여의도 정치’와 거리 두기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연합뉴스

## 추경·감세 등 현안마다 ‘엇박자’

### 당정 ‘정책 충돌’ 우려 목소리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았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한나리당과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무슨 다른 이견이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보여져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다”면서 “먼저 정부는 중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당과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긴밀한 사전 당정 조율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 정부 메시지로 분석된다.

하지만 당·정 정책 혼선의 일부 책임에서 당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자성도 함께 표출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리당도 정책위 의견이 당의 전체 의견으로 국민에게 비쳐서 혼선이 일어나는 일이 가끔 있다”며 “당의 중요정책은 정책위에서 협의한 것을,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해서 최종 정책을 점검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요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나리당이 사사건건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면서 여권 핵심부내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정의 두 축인 정부와 한나리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당정회의를 개최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감세 등 극히 급진적인 정책현안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며 사사건건 충돌했다. 그러나 일단락된 추경 편성안도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는 게 사실이다.

외견상으로는 여당이 ‘관정승’을 거둔 모양새이지만, 당정 양측이 합리적 조정을 통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안상수 한나리당 원내대표가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간간 ‘정책 충돌’ 사태에

## 창조한국당 ‘공천현금 의혹’ 수사 확대

檢, 비례 3번 유원일씨 등 14억 이상 입금 확인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의 ‘공천현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길)는 28일 이 당선자 이외에 다른 비례대표 후보 3명이 특별당비와 차입금 명목으로 14억원 이상의 자금을 당측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하고 공천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비례대표 3번 후보였던 유원일(50·전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씨가 지난 1월부터 4월 총선 직전까지 5차례에 걸쳐 차입금과 당체매입금, 특별당비 등 명목으로 4억5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특히 유씨가 비례대표 등록 전날(3월25일) 1억원의 당체를 한꺼번에 매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상위순번 배정과 관련해 당에 건넨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또 선관위 재산신고액이 4억8천만원인 유씨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신의 재산과 맞먹는 돈을 마련해 당에 건넸는지에 대해서도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입금한 돈을 찾아냈

다”며 “당 계좌를 통한 입출금 내역은 상당 부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씨는 27일 오후 국제녹색당 회의에 참석하며 보를 일정으로 브라질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당선무효 판결이 나오면 유씨가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밖에 비례대표 1번 당선자인 이용경 전 KT 대표이사는 1억1천만원, 4번 인 선경식 민주화운동공제회 상임이사는 2억원, 11번이었던 박경진 교수는 5천만원을 특별당비 또는 차입금 형태로 당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에 빌려주든, 당체를 매입하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례대표 후보 전원의 공천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더구나 특별당비의 경우 협행법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고 당체 매입금이나 차용금과 달리, 돈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더욱 짙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 ■ 비례 3번 유원일씨는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출신이다. 나이는 50세. 경정고시를 거쳐 조선대 기계공학과 입학, 3학년까지 다니다 지난 해 휴학계를 냈다. 당 제출서류에는 시

흥시장 개인특별보좌관 등의 경력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 명부에는 전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 등을 지낸 것으로 기재됐다. 이밖에 통신장비 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기자 dok2000@

## 민주 “MB 747 공약은 허구”

### 잘해야 3% 성장...무리수 동월 안돼

통합민주당은 28일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7%의 낮은 수준에 그친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747’이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냈다.

747은 연평균 7% 성장, 10년내 1인당 소득 4만달러, 10년내 세계 7대 강국 달성을 뜻한다.

특히 현 정부가 저조한 경제성장을 만회하려고 주먹구구식 대증요법만 펴는 바람에 당간간 혼선이 불거지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흥재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도 안돼 7% 성장은 완전 물거품이 됐다”며 “747이 허구였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경제정책이 너무 즉흥적이고 대증요법적”이라며 “불가 오르니 52개 품목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는 20년 전이나 했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농산물 가격이 50~60% 올랐고 공산품도 원가상승에 따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금년에 잘해도 3% 성장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다. 내가 들어서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처하는 게 옳다. 추경이나 금리인하, 환율시장 개입과 같은 무리수를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광주일보 창사 56주년을 축하합니다

光州日報 창사 56  
1952~2008

국회의원  
순천시장  
순천시의회 의장  
순천대학 교총  
순천청암대학  
순천교육청 교육장  
백진환 경대  
농협 순천시지부  
서감원  
노관규  
박동수  
장장반재  
장강길태  
장강진태  
김봉수  
남백원  
김영균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재  
새마을운동 순천지회장 이홍제  
강남석 재산업 직원 일동  
신성글로브 대표 강영춘  
파인힐스컨트리클럽 대표이사 김현수  
한국수자원공사 주임회계장 김봉수  
(주) 삼미금속 대표이사 남백원  
(주) 동일리사이클링 대표 김영균

낙안읍성민속마을 민속주유소 대표 김영옥  
전남도의회 원박홍수  
(주) 유실천건강랜드 대표 김진호  
순천산림조합 조합장 정태랑  
(주) 태성계 전 대표이사 차영두  
순천소방서장 음두호  
순천제일대학교 학장 성동재  
순천·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송영수

순천예술인총연합회 회장 김승렬  
금영전자 대표 윤한모  
순천중앙병원 원장 송영웅  
바자우정보기술(주) 개발부장(이사) 조승일  
순천경찰서장 이상기  
(주) 부일토건 대표이사 정재호  
(주) 원영 대표이사 이동원  
순천랜드 임직원 일동